

‘강효상·양정철’ 공방...여야 ‘강대강’ 대치

민주 ‘국기문란 범죄’ 한국 ‘관권선거 획책’...연일 강경모드 국회 정상화 협상 올스톱...나머지 야당들 양당 싸잡아 비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유출 논란과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을 둘러싼 의혹이 29일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야가 이를 ‘국기문란 범죄’, ‘관권선거 획책’이라고 각각 주장하며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어 국회 정상화 협상 재개는 더욱 요원해진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거듭 압박했다. 특히 한국당이 제시한 국회 정상화 조건의 철회를 촉구하며 유연한 입장에서 강경 모드로 선화하는 분위기다. 또한 서 원장과 양 원장의 회동에 대한 한국당의 공세는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해찬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2016년 당시 황교안 총리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이 유를 막론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3년 전 말씀을 생각한다면 즉시 국회로 돌아와 추경 통과와 민생입법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서훈 원장과 양정철 원장의 사적 만남을 빌미로 황교안 대표의 실인, 강효상 의원의 기밀 유출 사건을 물타기 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수용, 패스트트랙 철회·사과 요구는 가능하지도 진실하지도 않다”며 “과도한 조건을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30일 국회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어 6월 임시국회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서 원장과 양 원장의 회동을 정부·여당의 ‘관권선거’ 시도로 규정하고, 국회 정보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맞붙을 뵈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위 회의’를 열어 “정보 권력자와 민주당 최고 공천 실세의 어두운 만남 속에 선거공작의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다”며 “지하 선거병커 같은 곳에서 여론을 움직이고 선거를 기획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보위 소집과 관련,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정원장이 정보위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우

리 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정보위 소집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강효상 의원의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선 ‘유출이 아닌 폭로’라며 민주당과 뚜렷한 인식 차를 드러냈다. 나 원내대표는 “전일 정권의 군사 기밀을 들춰내고,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도 공개했는데 남이 하면 유출이고 내가 하면 폭로인지 적반하장”이라며 “국익 훼손이 아니라 체면이 훼손돼야 법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나머지 야당들은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양당’을 싸잡아 비판하는 분위기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과 제1야당은 기밀유출, 국정원장 독대 사건에 정치공세를 집중하고, 청와대 인사는 친문세력의 막후정치를 그대로 드러낸다”며 “이러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정의당, 출마자들이 직접 총선전략 짜다

내달부터 매달 ‘총선 캠프’...선거 전망·전략 공유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을 한데 모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당 총선전략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다음 달 13일 1차 ‘총선캠프’를 개최한다”며 “지역에서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선거전략에 반영하는 데 역점을 둔 행사”라고 밝혔다.

이번 총선캠프는 정의당이 총선체제로 전환하는 신호탄이다. 원내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공개적인 총선준비 작업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정미 대표는 중앙당이 자체 검토한 총선 전망과 전략을 후보들과 공유한다. 이어 후보들로부터 총선승리를 위한 전략을 제

안받아 토론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아울러 이번 총선을 관통할 시대정신을 함께 고민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 플랫폼 경제에 대한 대응 등 최신 트렌드를 학습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이 같은 행사를 오는 12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개최해 선거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고 당과 개별후보 간의 결속력을 높일 방침이다. 정의당은 7월 11일로 예정된 당 대표 선출 임정을 염두에 두고 총선체제 전환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한 당직자는 통화에서 “새 당 대표를 선출한 후 총선준비를 시작하면 늦다”며 “차기 지도부도 미루지 않고 일찌감치 움직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평화당 “정개특위 가동 선거법 논의 시작해야”

한국당 빼고 특위 가동 주장

민주평화당은 29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만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6월 말까지만 만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여야 4당은 정개특위를 바로 열어 과반수 통과·의결이 가능한 선거법 개정안 마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어차피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합의안도 한국당과 관계없이 여야 4

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만든 것”이라며 “시한에 쫓겨 급하게 만든 선거제 개혁안을 다시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정수 확대가 어렵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고집을 버려야 한다”며 “전국단위 비례제를 택하면 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60명으로도 충분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낙후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구 획정 조항을 개정하면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계없이 줄어드는 13석의 지역구가 지방과 낙후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유시민·이재명·조국...대선후보 나와야”

박지원 의원 “나도 나갈 것”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29일 “유시민, 이재명, 조국, 김부겸, 이낙연, 박원순, 정동영 등 모두 나와서 (대선후보 경쟁) 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 진보진영의 차기 대권 구도와 관련해 이 같은 바람을 언급한 데 이어 “저도 한번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던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탄원서에 서명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 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로 진보계 핵심세력이 소생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와 같은 훌륭한 분이 대권 후보로 함께 경쟁하면 자유한국

당 황교안 대표의 독주와 비교돼 진보계 핵심세력의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수석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 “진짜 답답하다”며 “북한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하겠다’가 문제인데 이 인사는 ‘우리 식구끼리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강 의원은 결과적으로 후배를 망쳤고, 외교를 망쳤고, 본인을 망친다”며 “이것을 감싸는 한국당 지도부도 계속하다가는 망친다”고 일침을 가했다. 통화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운제 주미대사에게 책임론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바른미래 혁신위 놓고 계파갈등 재점화

내달 4일 의원총회 혁신위 논의

당내 갈등을 수습할 혁신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 바른미래당이 29일 다시 두쪽으로 나뉘어 힘겨투기에 들어갔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들이 안철수계 의원 6명이 제안한 ‘정병국 전권(총괄) 혁신위원회’ 구성안을 고심 끝에 전격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안철수계와 유승민계는 공동전선을 꾸리고 당장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에 ‘정병국 혁신위’ 수용 압박에 나섰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6월 4일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위 구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잠시 소강상태를 맞았던 당내 계파간 갈등은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 원내대표와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병국 혁신위 안이 바른미래당의 내분을 수습하고, 총선까지 당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전 9시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안철수계 김수민 최고위원과 별도 회동을 갖고 혁신위 수용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들은 혁신위 구성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도출하지 못했다. 혁신위 출범이 자칫 손대표의 ‘시간 끌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의 우려 때문이었다.

이 최고위원은 “이견이 다소 있어도 지향점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데 동의했다”며 “(안철수계) 6명 의원의 진정성을 믿고 동참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은 물론 최고위원회의 장에서도 손 대표를 향해 ‘정병국 혁신위

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손 대표가 전향적인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정병국 의원은 손 대표가 직접 혁신위원장으로 추천했던 인물”이라며 “손 대표가 이제와 다른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제안하려는 것은 의도가 불순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 혁신위를 안건으로 다루자는 요청이 있었다”며 “6월 4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대표가 당을 위해 마음을 비우고 혁신위 안에 수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 최고위원은 “손 대표가 다른 혁신위 안을 가지고 있다면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 각자의 안을 가지고 당당히 경쟁해서 다수 동의를 얻자”고 말했다.

그러나 손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정병국 혁신위’에 대한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하며 팽팽히 맞섰다. 손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계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의 전에 기자회견 방식으로 발표를 하던데 이것은 정치공세”라며 “절대로 정치공세에 굴복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위가 대표 거취 문제를 논하는 것은 반대”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혁신위원장의 조건은 공정성, 독립성, 중립성이다. 당 내에서 열심히 찾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해 ‘정병국 혁신위원장’ 안에 대한 반대 의사가 다시 내비쳤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문병호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혁신위가 대표 퇴진의 도구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양정철 참석된 민주 확대간부회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뒤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보인다. /연합뉴스

한빛원전 1호기 정지 관련 영광 지역주민들에게 드리는 사과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번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으로 인하여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최근 한빛원전과 관련한 CLP 문제, 화재 발생 및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많은 우려의 시각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전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수원 임직원 모두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한빛원전 1호기 사건은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을 위한 성능시험중 부적절한 제어봉 인출 및 정비원의 제어봉 조작 그리고 운영기술지침서에 대한 사전 인지 부족 등 중요 설비를 담당하는 한수원의 미흡한 대응으로 발생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원안위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및 이에 따른 발전소 인력의 역량 확보, 설비운영 지침 및 절차 개정, 성능시험시 모니터링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한수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민 여러분께 설명 드리고 이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한수원 임직원 모두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전의 안전성 제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건으로 원전의 안전 운영에 대해 많은 심려와 불안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한수원 임직원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5월 27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및 임직원 일동